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19호		
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18. 08.2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심 경 석		

## I.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등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법령 변경 및 삭제(안 제1조, 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근거법령 및 구청장의 책무 변경(안 제2조)
- 다. 장려금·보상 등 지급에 대한 근거법령 구체적 명시(안 제4조)
- 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검사 할 수 있는 규정 전체 삭제(안 제6조)

- 마.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변경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준용하도록 변경(안 제7조제1항)
- 바. 과태료 납부기간, 통지방법, 이의제기, 법원통보 등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삭제(제7조제2항부터 제7조제4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2018. 7. 23. ~ 2018. 8. 12.(20일간)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사항 없음

## II.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를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되었으며,
  - 2018. 5. 17.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통보(자치법규과-1128)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임.

###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유

-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참조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관련 법령은 삭제하였으며,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근거법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구청장의 책무도 상위법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음.
- 안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의 근거규정을 ‘법 제7조제4항’에서 ‘법 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등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근거규정을 ‘법 제31조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6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는데,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와 중복되는 규정이며,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조례상 관련 규정(제7조제2항부터 제7조제4항까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전부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정 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신·구조문 대비표

# 관 계 법 규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 ----- ----- ----- ----- ----- ----- ----- -----.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 법 제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12조제3항-----  
-----  
-----.

② ----- 법 제12조제3항---  
-----  
----- 서울특별시장-----  
-----.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  
-----  
----- 서울특별  
시 서초구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②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  
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  
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  
인 경우 5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며,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여야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  
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  
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삭 제>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  
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  
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삭 제>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  
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처분) 구청장은 당사  
자가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 기한까  
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 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 수  
입은 구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  
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